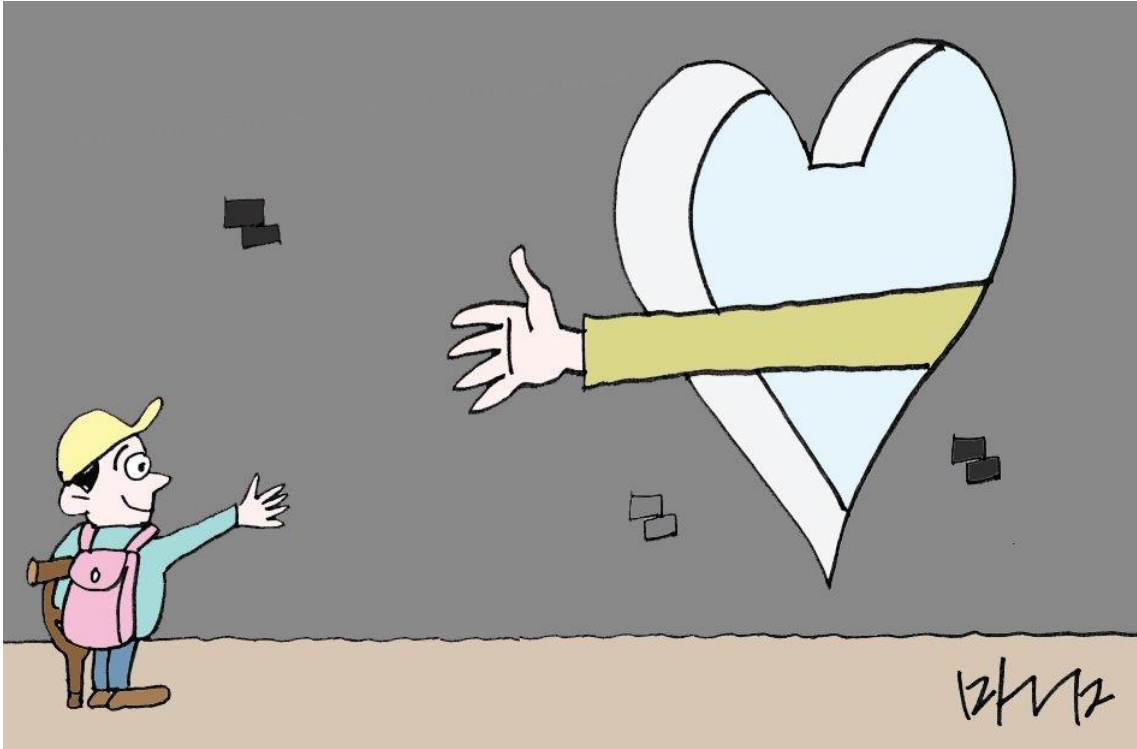


누가 장애학생 부모를 무릎 꿇게 하나



[전광우·손현덕 통과한 경제 - 33]이달 들어 청명한 날씨와는 반대로 온갖 어두운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북한 6차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가늠하기 어렵고 중국 사드보복은 더욱 노골화 되면서 피해 기업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호전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견고한 수출세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는 2분기 성장률이 0.6%로 떨어지고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의 청년실업률(8월 기준 공식통계 9.4%, 체감 실업률 20%대)로 먹구름이 짙어집니다.

이런 엄중한 안보·경제의 복합위기 와중에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를 경악케 합니다. 피투성이로 무릎을 꿇은 부산 여중생 영상에 이어 또 다른 사진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강서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는 문제로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수는 250여만 명, 인구의 약5%이고 평균 다섯 가구 당 1가구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습니다. 선진국 통계를 감안하면 실제 그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장애인 10명중 9명이 후천성이고 보면 장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나이 들면 누구나 장애화의 길을 갑니다.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만큼 우리 모두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서울의 특수교육 대상자 1만3천여 명 중 35%만이 특수학교 다니고 지난 15년간 특수학교 설립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는 힐러리 클린턴이 인용한 후 널리 알려진 아프리카 격언으로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죠. 두말할 나위 없이 장애 아이일 경우 더더욱 절실한 애깁니다.

전 세계 장애특수교육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미국의 ‘장애아동 교육법’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무상 공교육과 맞춤형 교육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197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미국에 첫발을 디딘 해였는데 유학기간 중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배려가 몸에 밴 일반시민들의 선진의식은 부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특수학교 유치에 적극적인 지역 사례도 종종 소개되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인성(人性)을 키울 수 있어 특수학교를 환영한다는 비장애학생 부모들의 설명과 그런 지역은 교육환경도 좋고 집값도 높다는 스토리로 기억납니다.

‘무릎 꿇은 엄마’ 영상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문턱에서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공동체정신 결여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라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의 부작용은 비단 특수학교 이슈에 국한된건 아니지요. 오만한 중국의 사드 보복도 님비현상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당초 부지 선정이 제때 제대로 결정되었더라면 롯데라는 개별기업으로 불똥이 튀거나 사드보복이 확산되는 빌미를 덜 줬을 겁니다. 국가안위를 위한 사드배치의 국민적 지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부추긴 집단·지역이기주의와 국론 분열은 국익 훼손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역사적 전환점에선 오늘날, 안보든 경제든 결국 국민의식에 달려있고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적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님비현상을 극복해야 사회통합이나 국론결집도 가능하고 국가미래도 밝아집니다.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이나 보상은 고려하더라도 원천적인 인식변화가 우선이지요. 장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지 못한다면 그건 ‘마음의 장애’를 가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국민연금이사장]